

“여자라서 안돼” 임금 등 고용 차별... 미투는 진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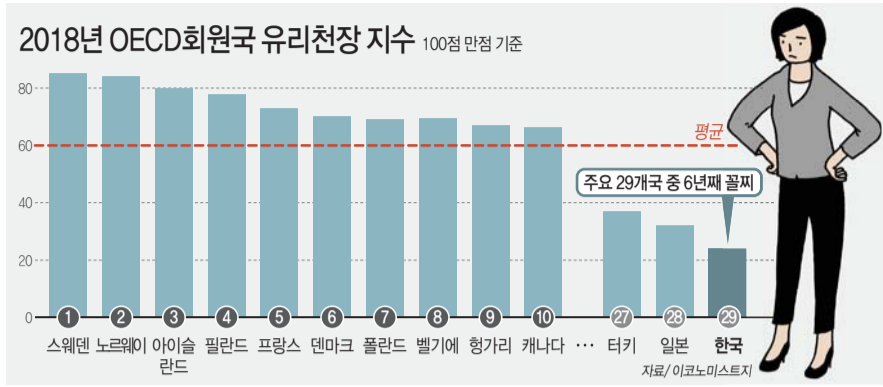
실패의 경제

렌트싱킹과 집단이기

(지대주)

(13) 깨지지 않는 유리천장

2016년 女 경제활동 참가율 58.4%
임원 여성차지 비율 OECD ‘꼴찌’
남직원 노골적 ‘시선강간’도 문제



정부가 ‘남녀평등 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에서 ‘남녀 차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고용, 승진, 임금, 업무 배치 등에 있어서 은연중에 성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만 봐도 우리나라의 남녀 차별 문제는 쉽게 드러난다. 2016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31위다. 한국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9% (18위)로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낮을수록 평등함을 의미하는데 평등과는 거리가 먼 수치다.

최근에는 채용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를 많이 뽑기 위해 여성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을 일삼던 금융권의 채용 비리가 불거지기도 했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정부는 지난달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47곳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2일 정부에 따르면 남녀고용 평등법상 성차별 금지 규정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 남녀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 채용함에 있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라는 문구가 고스란

히 담겨있다.

그러나 법엔 이런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실에선 무용지물이다.

얼마 전 기업 면접을 봤다는 A씨는 “남녀가 같이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여자들에게만 입사와 관련 없는 성적인 질문을 던져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여성의 결혼, 출산 문제 등의 이유로 업무의 지속성이 우려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걸 드러내고 차별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은행에 근무하는 B씨는 “열심히 준비해 은행에 들어갔지만 일을 하다보니 승진에 있어서도 여성이라는 한계가 명확

히 드러난다”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산업노조에 따르면 5대 은행에서 2차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 중 여성 비율이 8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정규직은 고용형태는 정규직이지만 일반 정규직과는 차별이 있는 정규직을 가리킨다.

은행 입사를 준비 중인 C씨는 “물론 우수한 남자 지원자도 많지만 합격자 스펙을 보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스펙이 월등히 좋아야 뽑힐까 말까”라며 “여자가 직업적으로 성취를 이루면 독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도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회사 대표들이 사석에서 성차별 채용 문제를 두고 ‘이래서 여자를 안 뽑으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들은 적이 있어 두렵다”고 밝혔다.

한국의 기업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현저히 낮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주요 29개국 중 꼴찌였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째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

채용의 문을 통과해 들어간 회사 내에서도 성차별과 성추행 문제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중견기업 사무직에 근무하는 D씨는 “제 주변 여직원들은 웃도 편하게 못 입고 다닌다”며 “반바지를 입으면 위아래로 훑어보는 남자직원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런 경험을 했다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시선 강간’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E씨는 “아침마다 ‘커피는 여자가 타줘야 맛있는데’라고 말하는 남자 상사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럴려고 힘들게 취업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간호사 F씨는 “회식자리에서 원장이 허벅지를 만지면서 ‘남자친구는 좋겠다’고 말하는데 정말 수치스러웠다’고 고백했다. 또 다른 간호사 G씨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남자인 나에게도 조용한데 유독 여자간호사에겐 소리치고 물건을 던지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소수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을 자주 목격하다 보니 직업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는 여성 동료들이 많다”고 밝혔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정부는 지난달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47곳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2일 정부에 따르면 남녀고용 평등법상 성차별 금지 규정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 남녀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 채용함에 있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라는 문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러나 법엔 이런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실에선 무용지물이다.

얼마 전 기업 면접을 봤다는 A씨는 “남녀가 같이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여자들에게만 입사와 관련 없는 성적인 질문을 던져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여성의 결혼, 출산 문제 등의 이유로 업무의 지속성이 우려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걸 드러내고 차별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은행에 근무하는 B씨는 “열심히 준비해 은행에 들어갔지만 일을 하다보니 승진에 있어서도 여성이라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산업노조에 따르면 5대 은행에서 2차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 중 여성 비율이 8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정규직은 고용형태는 정규직이지만 일반 정규직과는 차별이 있는 정규직을 가리킨다.

은행 입사를 준비 중인 C씨는 “물론 우수한 남자 지원자도 많지만 합격자 스펙을 보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스펙이 월등히 좋아야 뽑힐까 말까”라며 “여자가 직업적으로 성취를 이루면 독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도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회사 대표들이 사석에서 성차별 채용 문제를 두고 ‘이래서 여자를 안 뽑으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들은 적이 있어 두렵다”고 밝혔다.

한국의 기업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현저히 낮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주요 29개국 중 꼴찌였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째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

靑 “文 대통령, 리비아 납치 첫날 ‘구출’ 지시”

청와대는 리비아에서 지난달 6일 한국인 1명이 무장단체에 납치돼 억류 상태인 것과 관련,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그의 안전과 구원을 위해 리비아 정부 및 필리핀,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한국인 포함 4명의 동영상이 공개된 점을 거론하며 “리비아에서 납치된 우리 국민이 한 달이 다 돼서야 생존 소식을 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는 (동영상에서)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내 조국은 한국입니다’라고 말했다”며 “그의 조국과 그의 대통령은 결코 그를 잊은 적이 없다. 납치된 첫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출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그를 납치한 무장단체에 대한 정보라면 사막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청해부대는 수에즈 운하를 거

쳐 리비아 근해로 급파돼 현지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의) 얼굴색은 거칠었고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여 참으로 다행이다”라며 “나로 인해 아내와 아이들의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말에서는 오랜 기간 거친 모래바람을 맞아가며 가족을 지탱해온 아버지의 책임감이 느껴진다. 총부리 앞에서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내던져진 지아비와 아버지를 보고 있을 가족들에게는 무슨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그가 타들어 가는 목마름을 몇 모금의 물로 축이는 모습을 봤다. 아직은 그의 갈증을, 국민 여러분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노력을 믿고 그가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빌어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환송기 소나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진에어 직원이 범법자냐... 우리도 생존권을”

면허취소 반대 두번째 집회 개최

진에어가 면허취소에 반대하는 두 번째 집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노동조합 설립을 공식화했다.

진에어는 지난 1일 저녁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한 대국민 호소대회’를 열고 가까운 시일 내 노동조합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집회는 37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4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땀을 흘리며 면허취소에 반대하는 내용과 총수일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집회에 참가한 승무원 A씨는 “국토부의 잘못된 법집행과 해석에 반대한다”며 “항공사업법 9조에 의하면 외국인 대표이거나 임원수의 절반이상인 법인이면 면허취소를 받게 되지만 진에어에 외국인 임원은 50%미만이다”고 토로했다.

A씨가 밝힌 항공사업법 9조 ‘면허결격사유’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표이거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이거나 임원 중에 외국인이 있는 법인일 경우 면허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A씨는 이 두 개 조항이 결격사유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김동연 “8대 핵심선도사업에 30兆 투자”

(2022년까지)

초연결 지능화·스마트공장 등 벤처지주사 규제개혁도 추진

정부가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사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8대 핵심 선도사업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이다.

또한 최근 재계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요구에 따라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벤처지주사 규제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유경제는 해외에서는 활성화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진입규제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가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신서비스 창출을 통해 국민 후생을 증진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만큼,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정부의 방향을 마련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략적 투자분야를 선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한발 앞서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 있다”며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데이터·AI, 수소

경제, 블록체인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책임장관제 도입과 광역 지자체장과의 연석회의가 언급됐다.

김 부총리는 “8대 선도사업과 규제혁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소명의를 갖고 책임을 지는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재계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요구에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벤처지주사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지원’ 이달 내 윤곽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이달 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기존 발표 과제 중 효과가 큰 과제를 선별해 기간연장·규모확대 등을 모색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지원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폭염이 계속되는 데 따른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재점검했다.

아울러 전력수급 관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태스크포스를 활용해 전력수급을 검증·발표하게 하고, 수요급증 가능성에 따라 불시장애에 대한 대응 등 공급 측면의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8월 중순까지는 철저한 전력수급 관리가 필요한 만큼 산업부와 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이달 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기존 발표 과제 중 효과가 큰 과제를 선별해 기간연장·규모확대 등을 모색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지원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폭염이 계속되는 데 따른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재점검했다.

아울러 전력수급 관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태스크포스를 활용해 전력수급을 검증·발표하게 하고, 수요급증 가능성에 따라 불시장애에 대한 대응 등 공급 측면의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8월 중순까지는 철저한 전력수급 관리가 필요한 만큼 산업부와 국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조정실이 당분간 일일 점검하는 자세로 이를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호 기자